

## FTA체결과 부품소재산업 영향

최근 한국과 중국간 FTA 체결 논의가 고조되면서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일 및 한중 FTA체결에 따른 부품소재산업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가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에서 작년 9월에 발간, 주요 내용이 인용된다.

한국과 일본간 부품소재 교역은 한국이 원천기술 및 핵심기술 확보 부족으로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수출 생산증가가 핵심부품소재의 대일 수입으로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 한국 대일 부품소재 누계적자 지속

'00~'07년 동안 전산업 대일 무역수지 적자 누계 1,593억불 중 부품소재 무역수지 적자 누계는 1,137억불로서 71.4%를 차지한다. '05년 부품소재 대일무역적자는 161억불로 전체 대일무역적자 244억불의 66%에 해당되었으나 '06년에는 156억불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원화 강세에 따른 외부요인에 의해 '07년 대일 무역적자는 187억불을 기록했다. '07년 대일 소재의 무역적자는 전년대비 13.7% 증가하였으며, 부품의 무역적자는 전년대비 29.2% 크게 증가했다. 부품 무역적자는 '06년 63억불에서 '07년 81억불로, 소재 무역적자는 '06년 93억불에서 '07년 106억불이다.

부품소재의 관세율을 살펴보면, 부품산업에서 일본의 대부분 품목이 무관세인 반면, 한국은 전자부품을 제외고 대부분의 품목에서 8%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우, 일본은 무관세이나 한국은 8%의 실행관세율을 적용한다.

### 부품 관세율 일본 무관세, 한국은 8%

일반기계부품에서, 한국은 산업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11.2%, 실행관세율이 6.9%이다. 일본의 대부분 일반기계부품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된다. 전자부품의 경우, 일본은 기타 전자부품을 제외한 모든 전자제품에서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한국은 전자관, 일차전지, 축전지 3개 품목에 대해 8%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소재산업에 있어서는, 금속소재의 경우 '95년 WTO 출범 당시 한국, 미국, 일본, EU, 캐나다, 호주 등이 1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속제품에 대해 무관세화 추진을 합의했다. '04년부터 주철관을 제외한 모든 제1차 금속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중이어서 한일 FTA 체결로 인한 제1차 금속제품의 영향은 미미한 편이다.

화학제품의 경우, 실행관세율은 한국이 6.9%로 일본의 2.4%보다 훨씬 높으며, 한국의 정밀화학소재 관세율 4.1%~13.9%가 석유화학소재 5.5%~6.7%

보다 관세율이 더 높다. 정밀화학소재산업의 경쟁력이 타 선진국에 비해 열위에 있다고 보여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섬유소재산업에서는, 실행관세율이 한국과 일본 모두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한국의 실행관세율이 일본의 실행관세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높다.

### 일본의 비관세장벽 복잡 관행

한일 부품소재산업의 비관세장벽을 분석해보면, 일본은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거래관행,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 복잡한 유통경로 등 비가시적인 비관세장벽이 존재한다.

부품에서 일반기계부품의 경우, 비관세장벽으로 기준 인증제도 등의 비가시적 무역장벽이 수입제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일간 기준 인증제도에 차이가 있어서 한일의 제조업자나 수출업자가 상대국의 제도에 부합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제조 및 판매비용이 발생한다. 전자부품의 경우, 일본의 거래관행이나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 등 비가시적인 비관세장벽이 있으며,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 및 각종 표준 제조 등도 관련 업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소재에 있어, 금속소재의 경우 한국 철강제품의 판매기회 봉쇄, 영어 전적서 불인정, 항만하역 작업시 관련 협회와의 사전 협의 요구, 한국표준공업규격 불인정, 복잡하고 차별적인 유통경로 및 관행 등을 들 수 있다. 화학소재의 경우 일본은 폐쇄적인 상관행 및 복잡한 수입절차, 배타적인 유통경로, 까다로운 품질요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한국 대중 무역흑자 지속

중국 교역에 있어 부품소재산업은 무역수지의 흑자에 큰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중국과의 기술격차

가 줄어들면서 흑자폭도 감소하고 있다. '01년 부품소재 대중 무역흑자는 43억불로 전산업 무역흑자 49억불 중 87.8%에 해당하였으며, '07년에는 190억불로 전체의 100% 수준으로 전체 무역흑자와 동일한 수준이다.

그러나, '05년 200억불을 기점으로 한국의 부품소재산업의 대중 무역흑자는 감소하고 있다. 부품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대중 무역흑자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소재산업의 경우 무역흑자 증가세가 '06년 들어 감소되었다.

### 중국의 부품관세율 한국보다 높아

중국의 부품산업 관세율이 한국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며, 산업분야에 따라 관세율도 차이가 크다. 한국의 경우 전자부품과 기계부품의 관세율을 부가하지 않으나 중국에서는 3.5%~9.4%의 관세율을 부가한다. 전기부품에서는 양국 모두 관세를 부가하고 있으며 관세율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축전지 관세율은 한국이 6.4%, 중국이 9.4%이고, 개폐기와 계전기의 부분품에서 한국이 8%, 중국이 7%이다. 자동차부품에서는 자국산업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타산업 대비 한중 양국은 상당히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의 관세율은 한국이 8%, 중국이 13.8%이다.

소재산업에 있어, 부품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재산업은 한국과 중국 양국이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 관세를 부과한다. 화학소재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양국의 관세율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의 관세율은 5.5%~8%, 중국은 5.5%~9%이다.

금속소재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음극과 음극의 형제는 한국이 5%,

“

한일 부품소재산업의 비관세장벽을 분석해보면,  
일본은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거래관행,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  
복잡한 유통경로 등 비가시적인 비관세장벽이 존재한다.

”



중국이 2%이고, 알루미늄 합금의 관 쉬드 대는 한국이 8%, 중국이 4.2%이다.

#### 중국 비관세장벽 활용

중국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하여 기술장벽, 수입 허가, 통관절차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활용한다. 부품산업의 경우, 전자정보부품 오염통제관리방법에서 납, 수은,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과 난연제를 포함한 제품의 제품 라벨 또는 포장에 유독물질 명칭, 회수 이용가능 등 정보를 명시하게 한다.

자동차 및 통신기기 현지부품사용 유도를 위해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상무부와 해관총서 등에 보고해야 하며, 자동차 부품 수입시 해당 부품의 완성차 특징 여부를 자체 심사 후 완성차 특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완성차 관세율을 적용한다.

CD복제용 생산설비 수입모니터링 제도에서는 CD복제용 생산설비에 대해 자동수입허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고제품일 경우 수입이 불가하다. 소재산업의 경우 화학대체물질 규제에서 신규 화학대체물질 수입 승인을 위해 중국 내에서 중국산 시험 생물체를 이용한 생물학적 검사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 미국의 부품소재시장점유율 1위

'07년 전세계 부품소재시장에서 미국의 부품소재산업 시장점유율이 34.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30.8%, 일본 23.7%, 한국 11.2%이다. 중국은 4개국 중 7개 분야에서 최대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특히 섬유제품은 65%로 압도적이다. 조립금속제품이 37.0%, 컴퓨터 및 사무기기부품이 54.8%, 전자부품이 35.8%, 전기기계부품이 40.9%, 비금속광물이 32.7%, 제1차금속이 35.6%이다.

일본은 12개 분야 중 정밀기기부품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31.4%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4개국 중에서 시장점유율이 최고인 분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은 12개 분야 중 5개 분야에서 최고이다. 수송기계부품이 54.5%, 일반기계부품이 43.2%, 화학물 및 화학제품이 47.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이 32.6%를 차지하였다.

#### 부품소재산업의 특화지수는 일, 한, 중 순위

무역경쟁력 지수를 분석해보면, '07년 부품소재산업의 특화지수는 일본이 0.33, 한국이 0.12, 중국이 -0.18의 순이다. 일본은 부품이 0.36으로 소재 0.25보다 무역경쟁력이 더 강하다. 수송기계부

품이 0.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이 0.55, 조립금속 제품이 0.49로 무역경쟁력이 매우 강한 편이다.

한국은 수송기계부품이 0.38, 조립금속제품이 0.37로 상대적인 무역경쟁력이 강세이다. 그러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세이다. 비금속광물산업이 한국의 부품소재 12개 분야 중 가장 무역경쟁력이 약한 편이다. 한국은 자원부족국으로 비금속광물의 수입이 많기 때문에 무역경쟁력이 낮은 것이다.

중국은 섬유제품이 0.43, 조립금속제품이 0.33, 비금속광물이 0.33 등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산업 및 비기술집약산업에서 강한 무역경쟁력을 보인다. 정밀기기부품이 -0.32, 전자부품이 -0.31, 화학물 및 화학제품이 -0.30으로 무역 경쟁력이 가장 약한 분야로 조사되었다.

#### 대일 수출증대효과 미약

한일 FTA 체결에 따른 한국의 수출증대효과를 살펴보면, 일본의 대한 수입 상위 30개 품목 분석 결과, 5개 품목만이 관세품목으로 이들 품목의 대일 수출증대효과는 3.13%, 16백만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이 무관세이고 상대적인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어 상기 품목에 대해 수출 측면에서 FTA 체결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중국의 대한국 수입 상위 30개 품목을 분석하면, 대부분 품목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며 시장 우위도 선점하고 있어 수출 측면에서 FTA 체결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한국으로부터 수입 상위 30개 품목 중 22개 품목에 대해 7.3%의 관세가 부과되며, 산업별로는 화학 9개, 금속 4개, 기계 3개, 전자 2개, 전기 2개 자동차 2개 등이다. 대중 수출증대효과는 6.55% 증가한 1,895백만불로 전망된다.

#### 대중 전자분야 수출증대효과 큰 편

전자분야의 대중 수출증대효과는 '06년 2개 관세 부과 품목의 132억불 수출액의 7.65% 증가한 142억불이 기대된다. 전자분야 대중 수출증가율은 7.65%이지만, 대중 수출규모가 가장 커서 대중 수출증대효과 53.1%를 차지하게 된다.

중국의 경우 타국 대비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으며, 30개 품목 중 관세율이 10%가 넘는 품목이 1개, 9% 이상 3개 품목으로 이들 품목의 관세 철폐시 한국의 대중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대미 및 대일 수입 단가비 보다 낮은 국내 품목의 경우도 관세 폐지로 인한 효과를 볼 것이다. 폴리카아보네이트는 관세율 폐지 전 대미, 대일 수입 단가비가 0.9, 1.09수준이지만, 관세율 폐지 후 단가비는 0.96, 1.16으로 상승하여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상승할 전망이다.

#### 대일 수입증대효과 확대

한일 FTA체결에 따른 한국의 수입증대효과를 보면, 한국시장내 대EU 100대 수입품목과 대일 수입 일치 품목은 32개 품목이며, 이 중 20개 품목이 관세이고 12개 품목이 무관세 품목이다. 20개 관세부과 품목 중 2개를 제외한 18개 품목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관세 철폐시 대일 수입은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기계분야는 수입 일치 10개 품목 모두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기계산업의 대일 역조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우리나라 시장내 대비 100대 수입품목과 대일 수입 일치 품목은 26개이며, 이 중 16개 품목에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10개 품목에 무관세이다. 26개 일치 품목 중 전자가 34.6%, 기계가 30.8%로

가장 높으며, 이 중 전자품목은 모두 무관세이고 기계분야 일치 품목의 87.5%에 관세가 부과된다. 한일 FTA 체결에 따라서 관세 철폐시 16개 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6개 관세 품목 중 2개 품목을 제외한 14개 품목에서 8%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대일 부품소재 수입이 더 확대될 것이다.

대중 수입 100대 품목 중 한국의 대일 수입 100대 품목과 일치하는 품목은 33개 품목이며, 이 중 14개 품목은 관세품목이고 19개는 무관세 품목이다. 수입일치 33개 중에서 전자분야 일치 품목이 15개 45.5%로 가장 높다.

#### 대중 수입 편중 심화

중국과 한국간 FTA 체결에 따른 한국의 수입증대효과를 살펴보면, 한국시장내 대EU 100대 수입 품목과 대중 수입일치 품목은 20개이며, 이중 9개가 관세품목이고 11개가 무관세이다. 관세 9개 품목은 최소 6.5%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한중 FTA 체결시 중국에서 수입 편중이 심화될 수 있는 것이다.

대EU와 대중의 수입일치 20개 중에서 전자부품 40%, 기계부품 20%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전자부품은 8개 품목 모두 무관세로 한중 FTA 체결 효과는 미약할 것이다.

대미 백대 수입품목과 대중 수입일치 품목은 23개이고, 이 중 10개 품목에 관세가 적용되고, 13개에 무관세이다. 전자 60.9%로 대미, 대중 수입일치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다. 이 중 1개 만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FTA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대일 백대 수입품목과 대중 수입일치 33개 중 14개 품목이 평균 8.0% 고율관세로, 관세 철폐시 대일 수입품목이 중국으로 수입 전환되면 수입일치 33개 품목의 '06년 대중 수입액은 11/1% 증가한 181억불로 추정된다. 33개 일치 중 관세부과는 14개이며, 무관세 19개로 한중 체결에 따른 대중 수입선 전환으로 대일 무역역조 개선 효과도 기대될 수 있다.

일치 품목에서 전자가 45.5%, 금속이 21.2%, 전기가 18.2% 순이며, 전기산업의 경우 6개 일치 중 5개 품목에 관세 8%가 부과되어 한중 체결시 전기분야의 대일 역조 개선효과가 크게 될 것이다.

#### 한일 FTA, 대일 수입 7.9% 증대

대일 수입증대효과를 보면, 한국시장에서 대EU, 대미, 대중 수입 백대 품목과 대일 수입 상위 백대 일치 품목 중 한일 FTA 체결에 따라 7.8% 증가한 6억16백만불의 수입 증대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시장에서 대EU 및 대일 수입 백대 일치 32개 중 20개 품목이 관세품목이며, 이들 품목에 의한 대일 수입 증대효과는 7.9% 증가한 2억35백만불이 기대된다. 대미 및 대일 수입 백대 품목 중 16개 품목이 일치 및 관세 부과이고, 이들 품목에 의한 대일 수입 증대효과는 7.7% 증가한 2억40백만불이 기대된다.

대중 수입증대효과를 보면, 한국시장에서 대EU, 대미, 대일 수입 백대 품목과 대중 수입 상위 백대 일치품목 중 한중 FTA 체결에 따라서 7.8% 증가한 2억6백만불의 수입증대효과가 기대된다. 한중 FTA 체결시 대EU 및 대중 수입 백대 일치품목 중 관세 폐지에 따라서 9개 관세 품목은 8.1% 증가한 58백만불의 대중 수입증대가 기대된다. 대중 수입

상위 백대 품목과 대일 수입상위 백대 품목은 33개의 높은 일치율을 보이며, 이 중 14개 관세부와 품목의 대중 수입처 전환으로 인한 1억33백만불의 수입 증대효과가 기대된다.

### 한일 기술협력사업 적극 추진

한일 FTA 체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우선, 한일 기술협력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들 수 있다.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한일 기술협력사업이 필요하다. 일본의 부품소재산업은 한국보다 기술이나 품질 등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앞서 있는 상황으로, 기술이전 및 습득을 위해서 기술, 인력 교류 사업 등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의 관세 양보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일본 기업의 대한 기술이전 및 투자확대의 활성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은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체계적인 전문 기술인력 양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양국의 교역이 확대되는 동시에 경쟁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어서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등을 통한 생산제품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 차별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경쟁력 없는 부품소재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수입증가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부품소재업체들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구조 조정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제거하고, 시장 진입, 퇴출이 용이한 유연한 산업 구조의 조성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 중국시장 정보제공 확대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순 업종별 데이터 제공에서 벗어난 중국관련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대국으로 급부상 중인 중국시장의 꾸준한 장악을 위해 중국시장 환경 및 품목별 경쟁력 변화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있어야 한다.

자국기업제조를 위한 중국진출 기업의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자국 물품에 대한 수출 진흥에서 벗어나 기업 지원 대상을 자국제조에서 수요자 중심 지원체제인 자국기업제조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으로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현지화, 글로벌화의 성공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고급화, 고부가가치화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중국과의 기술력 격차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중국에 비해 국내 기술수준이 열위인 산업에서는 중국과의 공동 기술 개발 및 분업, 투자 등을 통한 수출 증대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합병인수의 활성화를 통한 부품소재기업의 전문화 대형화도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합병인수의 제도개선과 인센티브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